

“아름다운 환경, 건강한 미래”를 위한 환경정책 추진방향



김 학 주

환경부 정책총괄과장

☎ 02-2110-6670 hj54@me.go.kr

필지약력

- 한국항공대학 졸업('78)
- KDI 국제대학원 졸업('98)
- 기술고시 제16회('82. 1. 15 사무관 임관)
- 환경부 음용수관리과('95), 수질개선기획단('97) 생활오수과장, 자원재활용과장, 하수도과장('99 ~ '01)
- 수질정책과장('02)
- 환경기술과장('03 ~ '04), 부이사관 승진('04.8)
- '05. 1 ~ 현재 · 정책총괄과장

I. 환경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우리나라는 80년대까지 경제성장 중심의 각종 개발사업 및 환경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많은 환경 오염문제를 겪어왔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와서는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점진적으로 강화하였으며,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사후처리에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였다.

그 당시의 투자는 주로 정부주도의 환경투자시설에 집중되었으며, 하천수질, 대기환경, 쓰레기문

제 등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하나씩 거두어 나갔다. 정부에서는 물관리종합대책, 쓰레기총량제, 사회호 수질개선대책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더 나은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경제성장과 환경개선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이념이 정착되어 갔다. 이전까지 오염물질의 사후처리에 중점을 두던 환경정책이 자원수요관리를 통한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으로 전환되었으며, 정책수단도 규제에서 경제적유인으로 바뀌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념이 널리 퍼지면서 환경과 경제 그리고 사회의 균형발전을 모두 고려하는 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환경 또한 환경용량 개념에 기반한 수용체중심의 통합환경관리로 전환되기 시작하였으며, 환경정책의 결정방식도 중앙정부 주도 또는 중앙- 지자체 협력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New Governance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규제수단을 크게 줄이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율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 이후 새롭게 도입한 수질오염총량제, 환경보건 10개년 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제,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 등의 환경정책은 이러한 정책이념의 변화를 반영한 것들이다.

II. 그간의 환경정책 추진성과와 과제

환경정책의 추진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생활환경개선과 국민건강 보호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

다. 우선, 상하수도의 보급 등 환경투자의 방향을 도시뿐만 아니라 농어촌, 도서 등 환경서비스 취약 지역으로도 확대하였다. 2003년에는 수도권대기 질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수도권대기개선특별법을 제정하여 추진중에 있다.

한편 2004년부터 새집증후군,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정책에 착수하였으며, 작년에는 환경보건 원년의 해로서 환경보건 10개년계획을 수립하였다. 아울러 국민건강 위해성에 바탕을 둔 화학물질 관리정책을 펼쳐나가기 시작했는데, 2005년부터 제2차 유해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화학물질 저감을 위한 30/50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로는 사전예방적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토환경, 수질, 대기분야에 주요정책을 도입하였다. 우선,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회갈등을 예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자연경관심의제도 도입하였다.

아울러, 백두대간보호법, 야생동식물보호법 등 자연생태보전을 위한 법률들이 갖추어졌으며, 수질과 대기분야에 각각 환경용량범위내 친환경적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수질오염총량제와 대기오염 총량제가 도입·시행되고 있다.

환경과 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수단도 꾸준히 도입되었는데, 우선,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을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 환경기술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키워나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진 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Eco-Star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등 개도국에 대한 환경산업 수출지원, 친환경상품시장 확대 등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들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대내외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여건도 빠

르게 변하고 있는데, 대내적으로는 NOx, 미세먼지 등 선진국형 환경오염 문제 상존, 국토환경관리 여건 악화, 환경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증대, 건강을 중요시하는 정책수요 증가 등이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환경문제의 전지구화, 국제적으로 새로운 환경규범의 이행요구 증대, 동아시아의 경제 성장과 오염문제 심화가 그것이다.

III. 2007년 환경정책 추진방향

2007년에는 2006년까지의 주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전국민의 90% 이상이 모여 사는 도시의 환경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급속한 도시화, 도시팽창 등 양적인 성장에 비해 도시지역의 정주여건 등 생활환경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도시내 자연환경과의 조화가 깨지고 도시민의 삶의 질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상황인데 비해 국민의 욕구는 점차 증대되었다.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관리를 위해 지자체의 환경보전계획이 개발계획 및 도시계획 등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개발사업의 환경성을 평가하고, 도시환경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도시환경지표를 개발하는 등 국민들이 도시의 환경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도시의 생태를 도시민의 문화로 재창출하는 사업도 해나갈 계획인데, 도시숲과 실개천의 보전·복원, 환경기초시설의 에코리모델링,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지자체와 시민의 자율적 노력을 도시문화로 상징화 하는 도시얼굴갯기운동을 올해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환경자산을 발굴하여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이 환경을 지키는 것이 지역의 발전과 문화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실례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도시내 생태, 계획, 도심하천, 대기질, 환경성평가 등 도시환경 전문가들로 정책포럼을 운영하고,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미 선진국의 사례가 있는 친환경도시 모델을 경기도 가평군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환경의 생태친화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계획인데, 도시생태공간의 창출 및 복원, 도시생태공간의 연결성 제고, 하천생태복원 및 물순환체계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도시생활권의 생태면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생태면적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도시내 소생태계를 확충하기 위해 올해 도시생태현황지도작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말까지 도시지역생태복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생태복원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도시생태의 건강성회복을 위해 도시생태공간과 국토핵심생태축을 연결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에는 생태축 연결을 위한 구체적 현황 및 실태파악등 조사·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생태복원에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강화하기 위해 자연형 하천 복원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고,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수질이 양호한 하수처리수를 건전화된 도심지역의 유지용수로 공급하여 하천생태복원 및 친수환경 조성에 이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도시내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도시지역의 비점오염물질을 관리하는 시범사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06년부터 본격 시작된 환경보건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인데,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EU의 REACH에 대응하기 위해

CEO 간담회, 실무자 교육, 산업계 정보시스템 구축 등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업종별 도움센터 운영, 산업계 협의체 구축, 우수실험기관 육성 등 REACH 대응을 위한 기반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노약자 등에 대한 환경보건 조사 및 대책시행 등 환경보건10개년 계획에 따른 세부 이행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수용체 중심의 통합환경정책에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다.

IV. 맺는 말

21세기는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는 건전한 성장을 기대할 수 없으며, 이는 곧 환경이 지속가능발전의 필수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정책에 있어서도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포함되어야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환경부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부처는 물론 시민단체, 국민과 협조하여 국가와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서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환경과 사회?경제 정책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며, NGO,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정책을 함께 생산하고 이행하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실천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아름다운 환경과 건강한 미래”를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